

# 민주, 9월 전대...대표·최고 분리 유력

### 오늘 최고위서 논의...주중 전준위 구성 시동 대표 후보군 20명 달해 '친문 교통정리' 주목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애초 8월 하순으로 예상했던 전당대회를 9월 초·중순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번 주중 개략적인 일정을 확정,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원래는 2년 임기의 추미에 대표가 2016년 8월 27일 선출된 만큼 바통을 이을 새 대표 선출도 8월 말에는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당 전체가 지방선거 승리에 매진해온 터라 준비가 부족한 만큼 8월 안에 전당대회를 마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전당대회 사전절차로 조직강화특위를 설치하고,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위원회를 개편하기까지 시간이 빠듯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17일 "18일 최고위에 대표 선출을 위한 전체 로드맵이 보고되면 전당대회 날짜를 특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당대회는 지금 여건상 8월 말에 하기 어렵다"며 "추석(9월 24일) 전주에 하는 것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고, 최고위에도 그렇게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당대회가 9월로 밀리면 추 대표는 그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하게 된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시간표를 짠 후 곧바로 전준위 구성에 착수한다. 전준

위원장은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중진 의원이 맡는다. 전준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룰 세팅'이다.

현재로서는 최고 득표자가 대표가 되고 차순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 대신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순수 집단지도체제와 비교해 대표권한이 더 강력하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오는 2020년 21대 총선 공천권을 쥐기 때문에 더 막강할 수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을 확실히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이 대표를 견제하는 구조보다는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구조가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전준위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택할 경우 그 동안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자천타천 거론된 인물들도 대표선거와 최고위원선거로 진로가 나뉠 전망이다.

대표후보군으로는 7선의 이해찬 의원, 6선의 이석현 의원, 5선의 이종걸 의원, 4선의 김진표·박영선·설훈·송영길·안민석·최재성 의원, 3선의 우상호·우원식·윤호중·이인영 의원, 재선의 박범계·신경민·전해철 의원, 조선의 김두관 의원 등이 거론됐다.

4선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3선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중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친문재인) 세력이 누구를 단일후보로 내세울 것이냐는 최대 관심사다.

한 의원은 "당대표 후보들이 친문을 자처하는 것은 문 대통령에도 독이 된다"며 "특정세력이다 해먹는다는 프레임에 걸리면 보수언론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 “광주에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 장병완, ‘전문형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전남대 선정

광주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가 구축된다.

민주당평화당 장병완 의원(광주 동남갑)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전문형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에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은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혁신적 창작활동인 메이커운동을 사회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전문형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에 선정된 전남대에는 총사업비 26억7,000만원(국비 18억7,000만원, 시비 4억원, 자부담 4억원)이 투



입되며, 앞으로 외부기관과 연계 및 내·외부 전문역량 활용을 극대화하는 특화된 추진체계를 직접 운영 방식으로 구축하고 고도화 장비 운영·양산제품 등 전문제작서비스와 클라우드 펀딩 연계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장 의원은 "이번 전남대 선정으로 광주에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가 구축돼 다양한 분야의 제조창업이 성공물을 높이고 창작문화 저변을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북미회담 성과공유·남북경협 방향 모색 김경진, 국회 토론회 주관...5개 정당 공동 주최

민주당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갑)은 오는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와 남북경제협력'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협력 전망 및 과제에 대한 깊이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라운드테이블형식으로 진행되는 1세션은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 이 좌장을, 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연세대 김우상 교수, 동국대 고우환 교수가 발제를 맡아 좌담형식으로 진행된다.

김 의원이 좌장을 맡는 2세션에서는 동국대 김용현 교수와 현대경제



연구원 이해정 통일연구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토론에는 국방대 정한범 교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최용환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김예경, 이승열 박사가 참여한다.

김 의원은 "민주당평화당 당명에도 나와 있듯이 '평화'는 우리당의 모토이자 초당적으로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라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은 기자

6·13지방선거와 북미정상회담 등에 쏠려 있던 정치권의 시선이 '개각카드'로 옮겨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유렵순방 중 기자들과 만나 부분개각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을 맞아 장관들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여권의 '포스트 6·13 진용'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큰 폭은 아니더라도 일부 부처의 장관을 교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정외대는 "개각을 할지 말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 일각에서 소속 개각 및 일부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술술 흘러나오고 있다.

한 걸음 나아가 하마평도 나오고 있

### 당정청 정비론 맞물려 '개각설'

#### '공석' 농림장관 등 입각 의원 하마평

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11곳을 휩쓸며 의석 수를 119석에서 130석으로 늘린 만큼 개각이 있을 경우 일부 의원이 입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많이 입결에 오르고 있는 사람은 재선의 이개호 의원이다. 전남지사 선거에 당선된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공석을 이 의원이 채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었던 이 의원이 지난 3월 전남지사 당내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김 전장

당권주자로 나서는 것도 고려 중이라는 상황은 유동적이다.

이외에여석과교육부·국방부장관 등도 개각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현역 의원이 후임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민주당 일각에서 회자되고 있다.

현역의원이기도 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당대회 차출론'이 있는 만큼 두 장관의 자리가 비면 여러 후보가 검토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23일 러시아 국빈방문을 앞두고 있고, 민주당 8월 전당대회 등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가닥이 잡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연합뉴스

## ‘포스트 북미회담’ 본격 시동 문 대통령, 21일 러시아행 ‘한반도 비핵화’ 조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부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방문하면서 '포스트 북미정상회담' 조치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물론,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동북아 냉전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열리는 첫 정상외교 무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 동북아 평화를 위한 다자 안보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논의 하면서 냉전구조 극복에도 공을 들일 전망이다.

비핵화 이슈를 고리로 냉전체제 극복 등에 한·러 정상이 머리를 맞댄다면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의미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과 비핵화 문제는 서로 맞물린 이

슈"라면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순풍을 탄 만큼 이에 대비한 실질적 협력방안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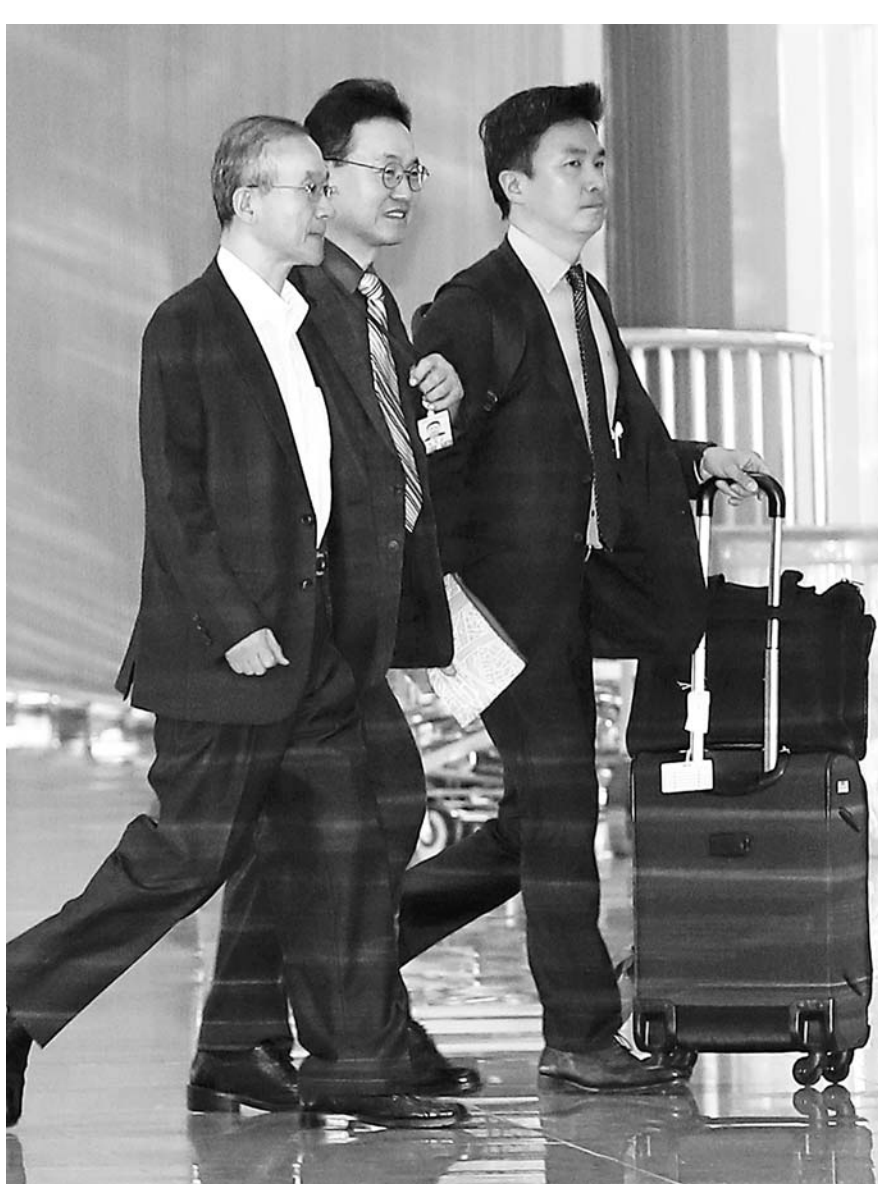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한러정상회담에서 러시아·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신북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가스관과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분야 등 '9개의 다리'를 놓는 '나인브릿지 전략'을 소개하면서 동시다발적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무드가 무르익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양국간에 논의돼온 경제협력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번 방문에서 신북방정책에 속도를 붙인다면 금강산이나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 개발하고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경제권벨트 구축 같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임성남 외교부 차관 한미전략포럼 참석...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맨왼쪽)이 국제교류재단(KF)과 미 전략국제문제 연구소(CSIS)가 공동 주관하는 제3차 한미전략포럼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기 위해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남북회담’ 체육·적십자 등 분과회의 개성사무소 준비 19·20일 방북...판문점 선언 이행

남북이 이달 말까지 2주간 체육회담·적십자회담과 철도·도로 연결, 산림협력 분과회의를 잇달아 가진다.

여기에 개성공단에 설치하기로 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임시사무소가 이달 중 개설될 가능성이 크고 민간교류도 시동을 거는 등 남북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4·27 판문점 선언' 이행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남북은 먼저 18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체육회담을 열고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공동참가와 남북통일 농구대회 개최방안을 논의한다.

남북은 이미 아시안게임에 공동입장하기로 뜻을 모아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기 사용여부 등 세부사안이 협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단일팀을 구성할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에는 금강산에서 적십자회담이 열린다. 이 회담에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8·15를 계기로 열기로 한 이산가족상봉행사를 비롯한 인도적 문제가 논의된다.

이산가족 행사의 세부일정 및 상봉규모 등과 함께 전면적 생사확인 등 이산가족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석방문제, 2016년 집단 탈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송환 문제도 각각 남북에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주에는 '동해선·경의선 철도·도

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과 '산림협력 사업'을 위한 분과회의가 각각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17일 "6월 마지막 주에 두 분과회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여기서는 일단 실태조사와 공동연구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응인 5·24조치로 완전히 차단된 남북경협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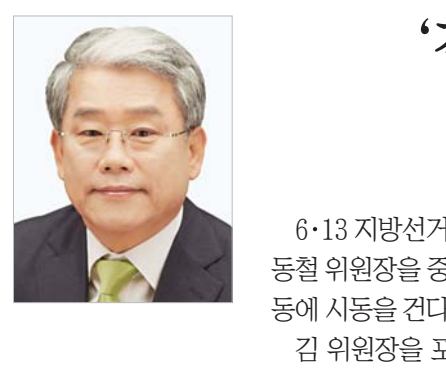
정부는 또 개성공단에 설치하기로 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임시사무소를 이달 중 개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통일부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현대아산 등 우리측 관계자 17명이 19일과 20일 출퇴근 방식으로 방북한다.

이들은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남북 교류협력협의사무소 및 직원숙소 개·보수에 필요한 준비를 할 예정으로, 침수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교류협력협의사무소 대신 종합지원센터에 임시사무소를 마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교류도 서서히 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는 20~2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해 북측과 민족공동행사 및 민간교류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 단체의 방북을 승인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김동철호’ 바른미래, 위기수습 오늘 첫 비대위 회의·19~20일 의원 워크숍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바른미래당이 김동철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동에 시동을 건다.

김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꾸려지는 비대위는 오는 8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전까지 활동한다.

17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비대위원으로 선임된 오신환·채이배·김수민 의원,

이지현 바른정책연구소 부소장은 18일 국립현대미술관 후 첫 비대위 회의를 개최, 비대위 체제의 출범을 알린다. 이어 19~20일 이틀간 경기 양평 용문산에서 캠핑형식의 의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김 위원장은 "쇄신방향은 당의 노선과 가치를 중도개혁과 실용을 추구하는 대중정당으로 분명히 하는데 두고, 당내 구성원간 소통과 화합을 우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